

세계도시 정책동향

Global Urban
Policy Trend

598호
2026. 3. 30.

도시 먹거리 정책

심층 리포트 도시 먹거리 정책의 전환: 글로벌 동향과 서울의 과제

정책 돋보기 파리지 |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의 도시 시스템 혁신
바르셀로나시 | 2030을 향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전략
슈투트가르트시 | 공공급식이 이끄는 기후친화적 먹거리 전환
말레이시아 | 도시농업 기반 취약계층 지원과 자립 모델

정책 뉴스 뉴욕시 | 홍콩 | 시드니시 | 키갈리시

도시 먹거리 정책의 전환: 글로벌 동향과 서울의 과제

김성아(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위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체계 조성

- ◎ 먹거리는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정책 분야임. 도시 먹거리 정책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 안전 확보, 먹거리 접근성 보장, 사회적 형평성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포괄적이고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 중임. 특히 2015년 출범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UFPP)은 도시 먹거리 정책의 대표적인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도시들이 먹거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 서울시는 2015년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7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제1기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옴
- ◎ 2026년 현재 서울시는 제2기 서울시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 먹거리 정책의 국제적 기준과 글로벌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 먹거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과 뉴욕, 토론토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

추진 배경

- ◎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은 2015년 밀라노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출범한 도시 간

글로벌 협약으로, 도시 먹거리 체계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게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전 세계 310개 이상의 도시가 가입하여 약 5억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음

- ◎ 협약의 핵심 목표는 도시의 먹거리 체계를 건강, 형평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경제적 회복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저렴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주요 내용

- ◎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은 6개 정책 영역과 37개 이행과제(action)를 중심으로 도시 먹거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 첫째, 거버넌스(governance) 영역에서는 도시 차원의 식품정책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강조함. 이를 위해 먹거리 정책 협의체와 같은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식품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며 정책 성과를 공유하도록 권고함
- ◎ 둘째, 지속가능한 식단과 영양(sustainable diets and nutrition) 영역에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일·채소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 공공 급식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을 확대하고 영양교육을 강화하며 영양표시(labeling) 및 광고 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 ◎ 셋째, 사회·경제적 형평성(social and economic equity) 영역에서는 푸드뱅크(food banks)와 커뮤니티 공동급식소(community food kitchens) 등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식품·농업 분야에서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함
- ◎ 넷째, 식품 생산(food production) 영역에서는 도시와 근교 지역의 식품 생산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도입하며 지역 농민과 소비자 간 직거래 네트워크를 강화함.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교육과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
- ◎ 다섯째, 식품 공급과 분배(food supply and distribution) 영역에서는 지역과 도시 단위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선식품 시장과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을 강조함
- ◎ 여섯째, 음식물 폐기물(food waste) 영역에서는 음식물 손실과 낭비를 줄이고 잉여 식품의 회수 및 재분배 확대, 재활용 비율 확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감축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함

[표 1]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MUFPP)의 6대 영역별 이행과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의 6대 영역별 세부 이행과제	
1. 거버넌스	
1	도시 기관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며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합함
2	다자간 플랫폼(먹거리 정책 협의회 등)이나 식품정책 자문관 임명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함
3	지역의 식품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파악평가하여 모범사례를 제도화함
4	도시 식품정책 계획을 수립 개정하고 적절한 행정 자원 배분과 규제 정비를 추진함
5	다부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데이터 수집관리 교환을 강화함
6	재난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만성적 식품 불안정에 대응할 도시 먹거리 체계의 회복력을 높임
2. 지속가능한 식단과 영양	
7	건강하고 안전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속가능 식단을 교육 홍보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산함
8	비만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응해 설탕·소금·트랜스지방·육류·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비 가공식품 소비를 늘림
9	소비자, 도시계획가, 서비스 제공자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단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함
10	공공기관·학교·병원 등에서 안전한 식단과 식수를 보장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11	민간·공공 기업이 지속가능한 식단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율적 수단(라벨링, 광고 규제 등)을 도입함
12	보건·식품 부문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방식과 사회적 포용을 통합적으로 촉진함
13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설비의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와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함
3. 사회·경제적 형평성	
14	현금·식품 지원, 푸드뱅크, 공동급식소 등 사회보호 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품 접근을 보장함
15	학교급식 등 식사제공 서비스를 건강하고 인근 지역에서 제철에 조달된 지속가능한 식품으로 전환함
16	식품농업 분야에서 공정 임금·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함
17	사회적·연대경제 활동을 장려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건강한 식품 접근을 확대함
18	공동체 정원·급식소·식품창고 등 풀뿌리 활동을 지원해 사회적 포용과 식품 제공을 강화함
19	참여적 교육·훈련 연구를 통해 지역 차원의 권리 기반 접근, 빈곤 완화, 영양 개선을 추진함
4. 식품 생산	
20	도시·근교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가공을 촉진하고 도시 회복계획에 통합함
21	도시와 인근 농촌의 식품 생산·가공 유통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농·가족농, 특히 여성 청년을 지원함
22	생태계 접근을 적용해 농업·생물다양성·관광·기후적응 등을 아우르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함
23	도시·근교에서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 접근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토지를 활용해 지역 농업을 촉진함
24	생산자에게 기술·훈련·재정 지원·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재이용수 등을 자원으로 활용함
25	생산자조직·직거래 네트워크·사회적 경제를 지원해 도시·농촌 식품 순환 구조를 강화함
26	농업에서 (폐)수 관리·재활용을 개선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함

5. 식품 공급 및 배분

- 27 도시로의 식품 유입 경로를 평가해 저소득·소의 지역도 신선히고 저렴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28 저장·가공·운송 인프라를 개선해 제철 식품 소비를 보장하고 손실·낭비를 줄이며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함
- 29 먹거리 안정 규제를 개선해 책임 있는 생산·공급을 보장하고 소규모 생산자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
- 30 공공조달 무역 정책을 검토해 짧은 공급망을 통한 건강식품 조달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함
- 31 공영시장·재래시장·도매시장 등 다양한 시장 시스템을 지원함
- 32 도시-농촌 시장 연계를 강화하는 인프라를 확충해 여성·청년 기업가에게 기회를 제공함
- 33 비공식 부문의 식품공급·고용·지역식단 기여를 인정하고 먹거리 안정·지속가능 식단·폐기물 관리 교육을 제공함

6. 음식물 쓰레기 감축

- 34 생산·가공·포장·소비 등 전 단계에서 음식물 손실·낭비를 평가·모니터링하고 정책 통합을 촉진함
- 35 행사·캠페인을 통해 음식물 낭비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시장·기업 매장 등에서 실천을 장려함
- 36 민간·학계·시민단체와 협력해 유통기한·등급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하고 재사용·재활용 정책을 마련함
- 37 생산·제조·유통·외식·급식 등 전 단계에서 버려질 위험이 있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회수·재분배함

자료: 밀라노시(2015),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뉴욕시의 먹거리 정책 10개년 계획(Food Forward NYC)

추진 배경

- 푸드 포워드 뉴욕시(Food Forward NYC)는 뉴욕시가 수립한 최초의 10개년 먹거리 정책 계획으로, 2031년까지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뉴욕시는 다양한 문화와 식생활을 가진 도시지만 동시에 건강한 식품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식품 기업과 단체의 경영난, 식품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비효율적인 식품 공급망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음
- 이에 뉴욕시 식품정책국(Mayor's Office of Food Policy)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함

주요 내용

- 5대 목표와 14개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됨
- 첫째,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 접근성

을 제고함. 이를 위해 저소득 지역의 신선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음식을 보장하며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 구체적으로는 미국 취약계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온라인 결제 확대, 저소득 지역의 냉장·저장 인프라 확충, 여름 급식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함

- 둘째, 식품 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식품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장하고 소규모 식품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차세대 식품 노동자 교육·훈련을 확대함. 실행과제는 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사업체 지원, 푸드 비즈니스 허브 구축, 교육기관과 연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함
- 셋째, 식품 공급망을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함. 지역 단위의 식품 허브 구축과 저장 및 운송 인프라 개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함
- 넷째, 식품의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공공 조달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함. 실행 과제로는 좋은 식품 구매 프로그램(Good Food Purchasing Program) 실행, 잉여 식품 회수 및 재분배 시스템 확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강화,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을 추진함¹

◆ 좋은 식품 구매 프로그램¹

- 좋은 식품 구매 프로그램(GFPP)은 공공기관의 식품 구매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조달 프로그램으로 구매 결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가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함
- 이 프로그램은 5가지 핵심 가치(지역 경제, 건강/영양, 노동권 보호, 동물복지, 환경 지속가능성)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기관들이 이 기준을 조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좋은 식품 구매 센터(Center for Good Food Purchasing)이며, 조달 기관, 지방 정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며 기술 지원, 평가, 보고,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함
- 각 참여 기관(학교, 병원, 도시 정부 등)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내부 조달 정책을 개정하고, 구매 목표를 설정하며, 조달 기준을 이행해야 함.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이 있어서 기관들이 조달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를 받음
- 이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 식량 정책위원회(LAFPC)에서 개발하여 2012년부터 LA 기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시카고,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뉴욕시는 2021년 좋은 식품 구매 구현을 위한 최초의 시 전체 목표 및 전략을 발표하였음
- 뉴욕시는 시 정부 기관들이 식료품 구매 시 GFPP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5억 달러 상당의 조달이 실행됨

1 좋은 식품 구매 프로그램(Good Food Purchasing Program) <https://goodfoodpurchasing.org/>

- ◎ 다섯째, 지식·데이터·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정책 실행을 지원함. 식품 불안정 측정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를 확대함. 구체적인 실행과제로는 뉴욕시 지역 먹거리 실무협의회(NYC-Regional Food Working Group) 운영, 지역 기반 자문체계 마련, 공공조달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이 추진됨

[표 2] 뉴욕시 먹거리 정책(Food Forward NYC)의 5대 목표별 실행과제

뉴욕시 먹거리 정책의 세부 실행과제(14개)	
목표1: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1	미국 취약계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온라인 사용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 접근성 강화
2	저소득 지역에 냉장·저장 인프라를 확충해 신선식품 공급 확대
3	여름 급식을 가족 단위로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식사 안정성 보장
4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 건강 지원
목표2: 식품 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5	식품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 보장을 강화함
6	소규모 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푸드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함
7	차세대 식품 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함
목표3: 식품 공급망을 현대적·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강화함	
8	각 자치구 단위에 지역 기반 식품 허브를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함
9	산업 비즈니스 존(IBZ)을 강화하여 저장·물류 인프라를 개선함
10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망을 강화함
목표4: 식품의 생산·유통·폐기를 지속가능하게 함	
11	좋은 식품 구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조달 과정에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함
12	음식물 쓰레기 회수·재분배 시스템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감축함
13	친환경 운송수단을 도입하여 식품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
목표5: 지식·데이터·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정책 실행 지원	
14	식품 불안정 데이터 측정·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
15	NYC 및 지역 단위 먹거리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
16	공공 조달 데이터와 식품 관련 통계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자료: 뉴욕시 식품정책국(2021), "Food Forward NYC: A 10-Year Food Policy Plan".

토론토의 먹거리 전략(Toronto Food Strategy)

추진 배경

- ◎ 토론토 먹거리 전략은 2010년 토론토 보건국(Toronto Public Health, TPH) 주도로 수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음
- ◎ 토론토 먹거리 전략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존 먹거리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먹거리 운동과 맞물려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음

주요 내용

- ◎ 토론토 먹거리 전략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하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먹거리 체계를 통해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거버넌스, 건강, 형평성, 식품 생산·유통, 음식물 폐기물의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 첫째,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토론토 식품정책위원회(Toronto Food Policy Council, TFPC)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시정부 간 협력체계 및 시민참여 구조를 제도화함
- ◎ 둘째, 지속가능한 식단과 영양 영역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반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대표적인 사례인 지역사

◆ 지역사회 먹거리 역량·일자리 지원 프로그램²

- 지역사회 먹거리 역량·일자리 지원 프로그램(CFW)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식품 취업자 교육 및 자격 인증, 영양 교육, 취업 지원을 통합한 프로그램임
- 토론토 보건국이 2014년부터 여러 지역의 기관 및 시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저소득 지역에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CFW는 시민들이 식품 산업에 진입하거나 소규모 요식업·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술과 역량을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역할도 함
- 2016~2017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 총 52명의 참가자 중 90%가 식품 취업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82%가 식품 기술 및 영양 지식 향상을 경험했으며, 25%가 프로그램 수료 후 고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CFW는 토론토 먹거리 전략의 핵심 실행과제로서, 사회적 형평성 강화와 지역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음

2 지역사회 먹거리 역량·일자리 지원 프로그램(Community Food Works) https://www.milanurbanfoodpolicypact.org/wp-content/uploads/2021/01/Toronto.-Food-as-a-tool-for-job-creation-and-integration-MPA17.pdf?utm_source=chatgpt.com

회 먹거리 역량·일자리 지원 프로그램(Community Food Works)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교육, 영양·조리 교육, 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식품 산업 진입을 지원함. 프로그램 참여자의 상당수가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성공하는 등 사회적 형평성 확대와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함

- 셋째,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에서는 푸드뱅크와 학생 영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식품 자산(community food assets)을 확대함. 푸드리치(FoodReach)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비영리기관이 신선한 식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망을 개선하고, 사회적 슈퍼마켓(social supermarket)을 도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식품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함
- 넷째, 식품 생산·공급·유통 영역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신선식품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식품 공급망을 강화함.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매년 도시농업의 날(Urban Agriculture Day)과 도시농업 주간(Urban Agriculture Week)을 개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
- 다섯째, 음식물 폐기물(food system waste) 영역에서는 도시 전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잉여 식품의 회수와 재분배 체계를 마련함. 이동식 신선식품 매장(mobile good food market)은 식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함. 또한 도시 폐기물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감축 캠페인을 추진함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위한 제언

-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 사례는 도시의 먹거리 정책이 건강, 환경, 경제,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함을 보여 줌
- 앞으로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정책 확대

-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과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들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공공급식 체계를 중심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앞으로는 도시 전체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과일·채소의 섭취량을 제

고하기 위한 환경 조성, 식생활 교육, 캠페인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과 지속가능한 식품의 활용을 높이는 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공공조달을 활용한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

- 세계 주요 도시들은 공공기관의 식품 구매력을 활용하여 도시 먹거리 체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좋은 식품 구매 프로그램(GFPP)을 참고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식품 조달 과정에서 건강, 지역경제, 노동권, 동물복지, 환경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조달 프로그램으로 뉴욕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공공 급식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울시 역시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공공부문의 식품 구매 규모가 매우 크므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조달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 시 지역 농산물 및 지속가능 식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건강·환경·지역경제·노동 기준을 반영한 '서울형 좋은 식품 구매 기준'을 개발하여 도입, 공공기관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식품 조달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먹거리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뉴욕과 토론토 사례는 먹거리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토론토의 지역사회 먹거리 역량·일자리 지원 프로그램(CFW)은 식품 교육, 영양 교육, 취업 지원을 결합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임
- 서울시 역시 먹거리 정책을 지역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직업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식품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먹거리 비즈니스 지원 등을 추진하여 먹거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지역 기반 먹거리 공급망 및 순환 시스템 구축

-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도시 먹거리 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서울시는 지역 농업 및 유통 인프라와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인 도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역 농산물 유통을 확대하는 지역 먹거리 유통 플랫폼 구축,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도시 식품 유통 인프라 개선, 도시농업과 근교 지역을 연계한 도시-농촌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잉여 식품 회수 및 음식물 폐기물 감축을 통한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

부서 간 협력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강화

- ◎ 세계 주요 도시들은 먹거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보건·복지·환경·농업·유통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된 먹거리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시정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서울형 먹거리 정책 협의체의 운영과 시민·전문가·생산자·기업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도시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 Comune di Milano, 2025,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Policy Brief 2025”, MUFPP Papers, Comune di Milano.
- ◎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2015,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UFPP Official Document, Comune di Milano.
- ◎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Food Policy, 2021, “Food Forward NYC: A 10-Year Food Policy Plan”, Food Policy Reports, City of New York.
- ◎ Toronto Public Health, 2018, “Toronto Food Strategy 2018 Report”, Toronto Food Strategy Papers, City of Toronto.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의 도시 시스템 혁신

프랑스 파리시 | 정연주 통신원

프랑스는 음식의 나라이자 농업국가로서 먹거리에 관심이 높음. 파리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Plan alimentation durable 2022-2027)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강·환경·경제·복지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의 시스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사업의 개요

- 파리시는 대부분의 대도시처럼 시민들의 먹거리를 도시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먹거리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파리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파리시의 먹거리 정책의 핵심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생산·소비·유통에 있어서 환경 부하를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내용

- 파리시의회는 2022년 3차 지속가능한 먹거리 계획(Plan alimentation durable 2022-2027)에서 ①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 ② 식품 접근성 개선, ③ 기후변화 대응, ④ 지역 경제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세움
-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 농업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과 공급망, 소비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 중
- 친환경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시작된 ‘파리컬터(Parisculteurs)’사업은 학교 옥상, 주차장, 공공시설 등 도시 유휴공간을 친환경 유기농 농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인식을 높이고자 함
 - 파리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기업, 시민단체, 주민, 농업인 등)이 공모를 통해 운영

주체로 활동

- 친환경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친환경 농업 교육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 탄소배출을 줄이는 지역 기반 식량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센강 먹거리 공급 사업 (Seine nourricière)’은 2020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이 함께 추진 중
 - 센강의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나 공공기관 식당)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친환경 먹거리 공급망 구축 사업
 -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기업·시민단체·농업인이 협력하여 연구와 실험, 실행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으로 추진
 - 2023년 7개의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 ‘아그리파리 센(AgriParis Seine)’이 출범하여 파리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
-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도시농업 인력양성을 위해 ‘파리페르틸(Paris Fertile)’이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진행
 - 지속가능한 먹거리 분야 직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
 - 관련 직업에 관해 알아보는 과정(10일), 자격증 과정(3~9개월), 창업 또는 취업 지원 과정으로 나뉨
- ◎ 시민 참여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셈(Paris Sème)’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녹화사업과 도시농업 투자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매년 봄 시민들에게 지역 식물 씨앗을 배포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진행
 - 도시농업, 물관리, 퇴비, 재활용, 생태 등을 테마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
 - 파리쿨터와 같은 파리시의 도시농업 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직업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
 - 공모를 통해 도시농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시설 투자를 지원함
- ◎ 취약층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사회연대 (Alimentation durable et solidaire)’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을 운영
 - 취약계층이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바우처 지원
 - 유기농 로컬 식품의 비중이 높은 공공급식을 제공

3 파리시에서 관여하는 공공식당 사업은 적어도 1300여 곳이며 연간 3천만 명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중간 유통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 식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식사 또는 요리 워크숍과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제공

성과

파리시에서 추진한 1·2차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결과, 2024년 기준 파리시 공공급식에서 지속가능한 식재료 비율이 59퍼센트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유기농 제품이 45퍼센트를 차지

- 파리시에서 관여하는 공공식당은 약 1,300곳에 달하며, 파리시는 이미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유기농 식품 구매 도시로 평가됨
- 친환경 도시농업 촉진 사업인 ‘파리컬터’는 2025년 기준 파리 시내와 근교에서 약 80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24헥타르(이 중 14헥타르는 파리 시내) 규모로 성장하였음. 또한 6,000명 이상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약 38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파리 근교(일드 프랑스)에 창업한 유기농 농장의 약 3분의 1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 ‘파리페르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현재 약 77개의 활동(도시농업 10개, 농업 식품 생산·가공 50개 등)이 진행 중이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720여 명 중 75퍼센트가 관련 업무 종사, 이직, 창업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함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도시농업 지원사업 ‘파리셈(Paris Sème)’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개 프로젝트에 83만 5천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농업 생산 역량 증가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시사점

-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먹거리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생산과 공급이라는 시스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파리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농촌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함
-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변화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https://agriparisseine.fr/notre-association/>

<https://www.paris.fr/pages/10-ans-des-parisculteurs-zoom-sur-4-sites-qui-font-rayonner-l-agriculture-urbaine-31079>

<https://www.paris.fr/pages/agriparis-seine-une-union-pour-nourrir-paris-de-facon-durable-23956>

<https://www.paris.fr/pages/paris-fertile-connaitre-se-former-se-faire-accompagner-vers-les-metiers-de-l-agriculture-durable-19772>

<https://www.paris.fr/pages/paris-seme-2-soutien-aux-acteurs-de-la-filiere-agricole-durable-de-proximite-20371>

<https://www.paris.fr/pages/seine-nourriciere-emprunter-le-fleuve-pour-mieux-nourrir-paris-26194>

<https://www.paris.fr/pages/un-plan-alimentation-durable-pour-paris-2705>

<https://www.parisculteurs.paris/en/>

2030을 향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전략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진광선 통신원

바르셀로나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전략 바르셀로나 2030'을 로드맵으로 사람·경제·지구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푸드 플랜을 실행 중임. 이 전략은 시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해 식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유럽 도시 정책의 대표 사례로, 기후 위기 대응과 공정한 식품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지향함

배경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전략 바르셀로나 2030 계획
 -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현재의 식품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사람·경제·지구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
 - 공정하고 건강하며 지구를 존중하는 식품 시스템을 목표로 9가지 목표 수립
- 9가지 목표
 - 제철·지역산·유기농 식품의 생산·판매·소비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동물 복지를 보장하며, 더 짧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식품 공급망을 구축
 -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업 지역을 보호·복원·육성
 -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장려
 - 식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 보장
 - 음식물 손실과 낭비를 방지
 - 기후 비상사태와 멸종 위기에 대응
 - 지속가능한 식품을 향한 문화·교육적 변화를 촉진
 - 식품 공급망 내에서 공정한 관계를 증진·육성
 - 이해관계자들을 조율·동원하여 기존 전략과 연계된 활동 수행
-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 39개의 방대한 시립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철·지역산·유기농·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되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식품 판매

-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탄소 배출량이 적은 식품 위주로 학교 급식 제공

제철·지역산·유기농·지속가능·동물 복지 식품의 생산과 공정한 유통망 확대

- ◎ 목표 및 실행 방안: 제철·지역산·유기농·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강화하고 소비를 늘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유통망 구축
- ◎ 프로그램명: 녹색 무역(Comerç Verd)
 - 바르셀로나 시립 시장의 판매자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이나 생산자 직송 식품을 더 쉽게 구매하도록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시립 시장 연구소가 카탈루냐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그램
 -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식품을 쉽게 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시립 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 판매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년 6개 시장에서 시작해 현재 모든 시립 시장으로 확대, 1,105개 점포 중 619개 참여
 - ‘녹색 무역’ 인증 제도를 통해 지역산·유기농·직송 제품 판매 가판대를 차별화하도록 지원
- ◎ 프로그램명: 테라 파게사(Terra Pagesa)
 - 카탈루냐 중소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철·지역 특산물의 마케팅과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 경로를 단축
 - 2021년 파게소스 연합(Unió de Pagesos)과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주도로 설립
 - 유통 경로 단축: 중간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카탈루냐 생산품이 바르셀로나 시내의 시립 시장과 지역 상점 네트워크에 직접 도달하도록 상업 및 물류 구조를 단순화
 - 비영리 농업 협동조합: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해 현재는 상점과 기관에 제품을 유통하는 비영리 농업 협동조합으로 발전
 - 지자체 지원: 바르셀로나시는 도매시장인 메르카바르나의 바이오마켓에 물류 센터를 설립하고, 제품 카탈로그를 확장하며, 생산자와 소매업체를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를 지원
 - 성과: 2025년 테라 파게사는 4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현재 약 50개 생산업체와 협력해 약 30개 사업체·관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 특히 동네 상점, 시립 시장, 학교 급식소, 병원, 주거시설 등 지역 사회와 밀접한 기관 중심으로 공급망 확대
- ◎ 프로그램명: 바이오마켓(Biomarket)
 - 바르셀로나의 신선식품 도매시장인 메르카바르나에 위치한 유기농 식품 도매시장

으로, 카탈루냐를 비롯한 스페인 전역에서 유기농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립 되었으며, 2020년 11월 23일 개장 이후 스페인과 남유럽에서 가장 큰 유기농 도매시장으로 빠르게 성장

- 유기농 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식품 모델을 향한 도시의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
- 총면적 8,900m²에 21개의 도매 판매대(도매업체용, 농업협동조합용, 복합 생산 업체용)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 생산자 판매 공간도 마련되어 있음
- 과일과 채소 이외에 콩류나 육류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며, 카탈루냐 유기농업생산위원회(CCPAE) 사무실도 위치해 있어 제품 인증을 보장
- 다양성과 품질: 도매업체·협동조합·지역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유기농 제품의 수량과 다양성이 증가
- 경쟁력 있는 가격: 공급의 집중은 시장 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품의 가격 대비 품질 비율을 향상
- 보안 강화: 위생 및 청결 관리, 유기농 제품 인증 라벨링 및 추적성 관리가 용이
- 이점: 메르카바르나에서 이미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식당은 유기농 식품을 구매 목록에 간편하게 포함할 수 있음

학교 급식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탄소 배출량이 적은 식품 위주 식단 제공

- 목표1과 실행방안: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식품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 목표2와 실행방안: 기후 비상사태와 멸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고배출 식품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재생 에너지·효율성 증진을 추진하며, 식품 관련 탄소 배출 감축을 우선 과제로 삼는 법률 제정을 지지
- 프로그램명: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급식
 - 50개 학교가 참여해 식단을 재조정하고 교육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유아교육 단계부터 중등교육 1단계까지 이어지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음식과 신체 활동' 교육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
 - 학교 급식을 더욱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
 - 특징
 - 급식에 신선한 채소·식물성 단백질 섭취 확대, 올리브유 사용 장려, 동물성 단백질 섭취 감소, 제철 농산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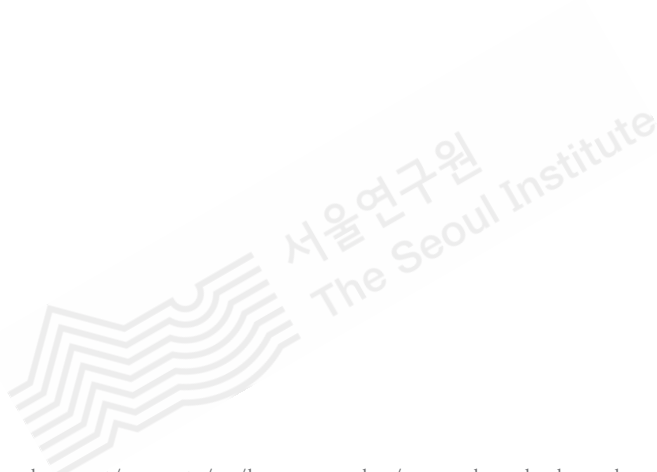
- 유기농 제품 사용률 2008년 3%에서 2021년 95%까지 증가
- 식단 변화에 따른 문화·소비 습관·요리와 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농업 종사자·외식업체·모니터링 담당자 등 관련 주체들을 위한 교육 필수
- 가정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 감소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
- ◎ 프로그램명: 공공 식품 조달 지침
 -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모든 공공 식품 조달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도구로, 지역 생산 능력과 기후 대응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준 도입
 - 지속가능한 식품 원칙과 연계된 기준이 공공 조달 과정에서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
 - 특징
 - 식물성 단백질 식품 섭취 증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 감소
 - 첨가당 및 초가공식품 감소
 - 유기농·제철·신선식품 공급 확대
 - 단거리 식품 공급망 통합 및 공정 무역 강화
 - 운송 관련 탄소 배출 감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사회적 연대 경제 도입
- ◎ 프로그램명: ECOLOCAL 인증
 - 유기농·지역 농산물을 중시하는 학교 급식소·식당·지역 사회 대상 최초 공식 인증
 - 지속가능한 외식업체를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생태 기준을 고려한 공공 조달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특징
 - 2020년 카탈루냐 학교 급식 농생태 네트워크(Xamec)와 슬로우 푸드 카탈루냐협력 사업으로 시작
 - 카탈루냐 주정부와 다양한 주체들의 지원과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자금 조달로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
 - 스페인 최초로 생태적 요소와 지역 근접성 요소를 모두 반영한 공식 인증
 - 국가 공공 생태 인증 기관의 조정기관인 인터에코(Intereco)에서 실시하는 전문적인 검사를 보장
 - 명확하고 간단하며 유연성을 갖춘 검증 시스템

시사점

- ◎ 바르셀로나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방대한 시립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철·지역

산·지속가능 식품에 대한 짧고 균형 잡힌 유통망을 구축하여 해당 식품의 판매량뿐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함

-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는 학부모의 영양 우려와 육류산업 반발, 잔반 증가 비판이 있었으나 학교 급식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실적 문제와 절충점을 모색하는 과정임



<https://ajuntament.barcelona.cat/mercats/es/los-mercados/mercados-de-barcelona/sostenibilidad/comercio-verde>

<https://www.barcelona.cat/alimentaciosostenible/es/programas-e-iniciativas/comercio-verde>

<https://www.terrapagesa.cat/ca>

<https://ajuntament.barcelona.cat/arxiuunicipal/arxiuhistoric/es/news/terra-pagesa-consolida-su-crecimiento-y-abre-nuevos-horizontes-como-cooperativa-agraria-1604410>

<https://www.barcelona.cat/alimentaciosostenible/es/biomarket>

https://www.mercabarna.es/sectors-activitat/biomarket/es_index/

<https://www.aspb.cat/documents/menjadors-escolars-sans-sostenibles/> <https://www.barcelona.cat/alimentaciosostenible/ca/menjadors-mes-sans-i-sostenibles>

<https://www.barcelona.cat/alimentaciosostenible/ca/que-fem/instruccio-de-compra-publica-alimentaria>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22/06/07/ada-colau-i-pau-gasol-visiten-lescola-la-pau-centre-educatiu-que-implemanta-el-projecte-sisme-de-promocio-dhabits-saludables/>

<https://ecolocal.eco/es/>

공공급식이 이끄는 기후친화적 먹거리 전환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슈투트가르트시 | 정윤주 통신원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먹거리 정책의 중심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의 전환에 두고 있음. 슈투트가르트시는 이를 토대로 기후친화적 식생활 정책과 유기농 급식 확대, 품질 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결합해 도시 차원의 실행 체계를 구축한 사례임. 이 접근은 먹거리 정책을 선언이 아닌 실제 운영·조달·수용성 관리로 연결한 실행 모델을 보여 줌

공공급식을 핵심 경로로 삼은 주 전략

-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먹거리 전환의 출발점을 소비자 인식 개선보다 급식 체계 개편에 둔 점이 특징임
- ◎ 영양전략의 핵심은 시민 개인에게 ‘좋은 소비’를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 수요가 발생하는 공공급식 공간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방향임
- ◎ 그 결과 공공급식은 복지의 부속 영역이 아니라 건강·기후·지역경제를 함께 묶는 핵심 실행공간이라는 위치를 갖게 된 상황임
- ◎ 이 전략은 두 방식으로 집행됨. 첫째, 유기농 공공급식 전환 사업(Bio gemeinsam genieß en)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학교, 어린이집, 병원, 기업, 노인시설, 케이터링 업체 등의 급식 전환 지원 사업. 둘째, 주 소유 구내식당에 적용되는 행정지침(VwV Kantine)으로, 2030년까지 최소 40% 유기농·지속가능 식재료 조달을 의무화
- ◎ 유기농 공공급식 전환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식재료 교체가 아니라 급식 운영 전반의 전환임: 목표는 급식에 쓰이는 지역산 유기농(bio-regional) 식재료 비중 확대이며, 동시에 영양기준, 유기농 인증, 음식물 쓰레기 감축, 신선조리 확대, 내부 소통 개선까지 함께 요구함. 즉 공공급식을 건강·기후·지역 조달을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임

슈투트가르트시가 도시 행정으로 옮긴 방식

- 슈투트가르트시는 먹거리 정책을 단순 홍보사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기후정책과 일상 행정에 연결한 사례임
 - 시는 기후친화적 식생활 정책의 핵심을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식물성 중심 식생활로 설정함. 동시에 “지방정부가 모범을 보인다”는 원칙 아래,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급식과 생활환경부터 바꾸는 접근을 취함
 - 먹거리 전환을 시민의 자발성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영역의 조달과 운영을 통해 실현하려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임
- 가장 가시적인 사례는 어린이집(Kita) 급식임
 - 슈투트가르트시는 약 150개 시립 어린이집에 하루 약 7,500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식은 독일영양학회 기준과 어린이집 급식 품질인증(FIT KID)을 충족함
 - 2023년 기준, 시립 어린이집 152곳이 품질인증을 받았고 유기농 비중은 57%에 도달하며, 건강·유기농 품질·기후보호를 도시 조달체계 안에 결합한 대표 사례로 꼽힘
- 중요한 대목은 유기농 비율 자체보다 운영 방식의 전환임
 - 시는 급식 품질을 인증 체계와 연결해 메뉴 구성, 조리·공급 방식, 영양기준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이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매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 능력 위에서 실현됨을 보여 주는 사례임
 - 공공급식 전환이 결국 조달, 물류, 품질 관리, 현장 운영을 함께 다루는 문제임을 드러냄

학교급식을 ‘기후친화적 먹거리 전환 정책’으로 다룬 점

- 슈투트가르트시의 또 다른 특징은 학교급식을 단순 공급행정이 아니라 수용성을 함께 관리하는 정책영역으로 다룬 것임
 - 2021년 학교급식 조사에는 학교 72개, 학생 3,891명, 학부모 1,358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맛, 포만감, 배식 인력, 공간 환경, 학생 참여, 식사 공간의 소음과 쾌적성 등 급식 수용성 전반을 포함함. 이미 25% 유기농 비중을 도입한 일부 학교와 아직 시행 전인 학교도 분석 대상에 포함됨. 이후 학교급식 입찰과 식당 계획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시의 후속 방침이 제시됨
- 공공급식을 단순 조달정책이 아니라 생활정책으로 접근한 사례
 -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높여도 학생이 실제로 먹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으면 정책 효

과가 제한됨. 따라서 공공급식 전환은 조달 기준 강화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용자 수용성·공간·참여·운영 품질을 함께 다뤄야 함을 분명히 보여 줌

지역 협력과 도시농업은 보조 축의 성격

- ◎ 슈투트가르트시는 공공급식 외에도 지역 협력과 시민 참여를 보조 축으로 연결함
 - 슈투트가르트 도시권 먹거리협의회(Ernährungsrat StadtRegion Stuttgart) 지원을 통한 생산-소비 연결
- ◎ 식품 공유 거점(Fairteiler) 운영과 도시정원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기반 도시농업 활성화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역시 유기농 모델지역(Bio-Musterregionen)과 지역 먹거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지역 안에서 잇는 구조를 확대해 옴
 - 다만 이들 사업은 중심축이라기보다 공공급식 중심 전략을 보완하는 보조 장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 ◎ 이 사례의 시사점은 먹거리 정책의 성패가 사업 수의 많고 적음보다 시민이 반복적으로 접하는 공공급식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음
 - 서울도 푸드 플랜을 문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급식을 핵심 집행 경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시 직영·공공기관 급식에는 직접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은 교육청·자치구·학교 운영 구조에 맞춘 공동 관리체계를 설계하는 방식이 요구됨
 - 조달 기준도 친환경 비율에만 머물지 않고 품질관리, 이용자 수용성, 음식물 쓰레기 감축, 운영역량까지 함께 묶는 접근이 필요함
 - 지역 먹거리와 도시농업은 본류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공급식 중심 전략을 보완하는 보조 축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https://mlr.baden-wuerttemberg.de/de/unsere-themen/ernaehrung/ernaehrungsstrategie-bw?utm_source=chatgpt.com “Ernährungsstrategie Baden-Württemberg”

https://mlr.baden-wuerttemberg.de/de/unsere-service/presse-und-oeffentlichkeitsarbeit/pressemitteilungen/pressemitteilung/pid/kabinett-beschliesst-weiterentwicklung-der-ernaehrungsstrategie-baden-wuerttemberg?utm_source=chatgpt.com “Kabinett beschließt Weiterentwicklung der ...”

<https://mlr.baden-wuerttemberg.de/de/unsere-themen/ernaehrung/gemeinschaftsverpflegung/bio-in-der-gemeinschaftsverpflegung> “Bio in der Gemeinschaftsverpflegung: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ändlichen Raum und Verbraucherschutz Baden-Württemberg”

<https://mlr.baden-wuerttemberg.de/de/unsere-themen/ernaehrung/gemeinschaftsverpflegung/landeskantinen> “Landeskantinen: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ändlichen Raum und Verbraucherschutz Baden-Württemberg”

<https://lern-bw.de/%2CLde/startseite/gemeinschaftsverpflegung/nachhaltige-schulverpflegung-kommunales-konzept> “Nachhaltige Schulverpflegung mit kommunalem Konzept - LErn BW”

<https://jetztklimachen.stuttgart.de/klimaschonend-ernaehren> “Klimaschonend ernähren | Stuttgarter Klimaschutzkampagne”

<https://www.stuttgart.de/leben/umwelt/klima/klimastrategie/klima-fahrplan-2035/klimagerechte-ernaehrung> “Klimafreundliche Ernährung | Landeshauptstadt Stuttgart”

<https://www.stuttgart.de/pressemitteilungen/2023/maerz/fit-kid-zertifizierung> “Fit Kid“-Zertifizierung | Landeshauptstadt Stuttgart”

https://www.domino1.stuttgart.de/web/ksd/KSDRedSystem.nsf/0/C0A541038D76CA00C125869C004D4B0A/%24File/F5C5465A62AED502C125867D00465B01.pdf?OpenElement=&utm_source=chatgpt.com “Ergebnisse der Studie \“Gutes Essen in der Schule\“ ...”

도시농업 기반 취약계층 지원과 자립 모델

말레이시아 | 홍성아 통신원

말레이시아 중앙정부 및 사바주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을 장려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자생적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도시화로 농지가 감소하고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공동체 텃밭과 가정 텃밭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민관 협력 기반의 식량 자립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 참여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책 배경

- ◎ 도시화로 빠르게 감소하는 농지와 산림
 -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KPKM)는 농경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상실과 기후변화를 지목. 쌀 생산 농지는 2021년 68만 4,545헥타르에서 2022년 63만 7,936헥타르로 6.81% 감소. 같은 기간 헥타르당 평균 쌀 생산량은 2012년 3,797kg에서 2022년 3,577kg으로 5.79% 감소
 - 말레이시아의 최대 산업 거점이자 인구 밀집 지역인 슬랑오르주는 1991~2021년 개발 지역이 15.54% 증가한 반면, 농지와 산림은 각각 3.07%, 14.01% 감소
- ◎ 방치되는 도심 유휴 공간
 - 2021년 기준 쿠알라룸푸르의 도심 유휴지는 약 2,121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배에 달함

크부니티 프로그램

- ◎ 크부니티(Kebuniti)는 ‘크분(Kebun, 텃밭)’과 ‘코무니티(Komuniti, 공동체)’의 합성어로 2014년 지역사회농업발전프로그램(Community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CADP)을 기초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가경제회복계획(PENJANA) 자금을 투

입해 현재의 핵심 국가 정책으로 격상됨

- 도심 유희지를 활용해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
 - B40(소득 하위 40%, 5,250링깃 이하) 등 취약계층과 PPR(국민주택 프로그램, 월소득 3,000링깃 이하 대상) 거주민을 중심으로 지원
 - 국공유지 및 미개발 사유지를 텃밭 부지로 제공하고 현금성 지원 대신 농기구·수도·비료·종자 등 농업용품을 지원
- 2026년 슬랑오르주는 150개 텃밭에 129만 5,000링깃, 페락주는 45만 링깃을 농업용품 구매 비용으로 지원
- 신청 대상과 수혜 조건
 - 18세 이상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구성된 최소 10인 공동체(대표 선발과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 취약계층 공동체 우선 선발, 기업·학교·공기관도 참여 허용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전방위적인 식량 자립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함

가정 텃밭 이니셔티브(Kitchen Farming Initiative)

- 2025년 3월 1일 사바주 농촌경제혁명(RAER) 정책의 하나로, 농민·어민 10만 명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최소 20억 링깃의 경제 효과 창출이 목적
- 사바주는 말레이시아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식량 자급률(SSL) 60% 달성을 목표로 추진
 - 옥상·복도·베란다·골목 등 생활권 내 텃밭 육성 지원
 - 도시농업에 적합한 다양한 전문 장비 제공 및 저금리 대출 지원
 -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40세 이하 도시농업 전문가 18명 선발, 도시농업 희망자에게 농사 요령과 정보 제공
 - 농수산물 수집센터(APCC) 설립: 현재 16개 센터, 향후 9개 센터 추가 예정
 - 생산한 제품의 판로 개척 위한 마케팅 지원: 데사몰(Desamall)⁴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틱톡 마케팅 교육 제공 및 틱톡(TikTok) 마케팅 교육 제공

정책 평가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가계 자립 기반 지원

4 자국 영농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부 주도형 이커머스 지원 플랫폼으로 말레이시아 농촌개발부(KPLB)가 운영

[그림 1] 도심 유휴지 활용하는 도시농업(출처: The Star)



-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가계 소득 증대 도모
-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도시농업 인프라·유통구조·전문 기술을 지원해 자생적 경제 모델 구축

『CA-ANN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셀랑고르의 토지 이용/피복 변화 분석 및 예측(Assessment of Land Use Land Cover Changes and Future Predictions Using CA-ANN Simulation for Selangor, Malaysia)』

『도시 유휴지의 생태적 잠재력 평가를 위한 GIR 기반 다층 프레임워크(A GIS-Based Multi-Tier Framework for Assessing the Ecological Potential of Urban Vacant Land)』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2/12/sabah-kitchen-farming-initiative-set-to-be-launched-this-weekend-says-state-minister>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2/12/sabah-kitchen-farming-initiative-set-to-be-launched-this-weekend-says-state-minister>

<https://bernama.com/bm/news.php?id=2187327>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4631561_Property_Market_Efficiency_Developed_or_Vacant_Property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4/03/20/over-103000ha-of-abandoned-agricultural-lands-in-malaysia-says-joseph-kurup#goog_rewarded

<https://www.bernama.com/tv/news.php?id=2534745>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5/12/1339132/sabah-looking-increase-food-security-kitchen-garden-way>

<https://bernama.com/en/news.php?id=2273713>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92647460_A_GIS-Based_Multi-Tier_Framework_for_Assessing_the_Ecological_Potential_of_Urban_Vacant_Land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1/03/673113/mafi-marks-year-successful-initiatives>

<https://www.bernama.com/en/news.php?id=1857322>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3/05/907453/aaron-almost-50-cent-community-gardens-already-commercialisation-phase#google_vignette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2/12/sabah-kitchen-farming-initiative-set-to-be-launched-this-weekend-says-state-minister>

<https://www.nabalunews.com/post/kitchen-garden-tour-boosts-sabah-s-food-security-drive>

<https://www.dailyexpress.com.my/news/276212/tenom-to-have-rm1-2-million-agri-processing-centre/>

안전한 전기자전거 이용 프로그램

전기자전거 사용 확대와 배터리 화재 사고 증가

- ◎ 미국 주요 도시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용을 장려해 옴
- ◎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급증하면서 도심 밀집 지역과 주거·상업 시설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
- ◎ 기존 안전 지침 홍보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해짐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계획과 인증제도 내용

- ◎ 뉴욕시 교통부(NYC DOT)는 전기자전거 화재 사건의 주된 원인을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 사용 및 잘못된 충전방식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계획(Charge Safe, Ride Safe) 발표하고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인증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함
- ◎ 지역법(NY Local Law 39)에 근거해 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등 리튬이온 배터리 구동 장치는 판매·임대 시 반드시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을 받아야 함
- ◎ 뉴욕시는 배달원들이 UL 인증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방청은 100만 달러 규모의 대중 교육 캠페인을 통해 배터리 위험성 인식을 제고함.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증된 안전한 전기자전거와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려 함
- ◎ 2025년 2월부터 1층에 상업·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건물과 5세대 이상 주거 건물 인근에 안전한 배터리 교체·충전 캐비닛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설치 시 시정부 승인 필요

정책적 시사점

- ◎ 뉴욕시 교통부, 주택 보존·개발부, 환경부, 소방청 등 다양한 기관이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 ◎ 법제화된 규제와 인증제도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충분한 홍보·교육·물질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김규리 통신원



<https://www.nyc.gov/html/dot/html/pr2025/expand-access-e-bike-battery-charging-on-sidewalks.shtml>

<https://www.nyc.gov/assets/home/downloads/pdf/office-of-the-mayor/2023/micromobility-action-plan.pdf>

<https://www.nyc.gov/office-of-the-mayor/news/195-23/mayor-adams-plan-combat-lithium-ion-battery-fires-promote-safe-electric-micromobility#/0>

<https://www.cbsnews.com/newyork/news/e-bike-eyed-as-possible-cause-of-midwood-brooklyn-fire-fdny-says/>

<https://www.nyc.gov/site/dca/news/044-23/city-reminds-retailers-consumers-only-purchase-certified-lithium-ion-batteries-mobility>

<https://www.nyc.gov/site/dca/news/041-24/mayor-adams-speaker-adams-new-enforcement-powers-prevent-sale-dangerous->

<https://www.ul.com/services/e-bikes-certificationevaluating-and-testing-ul-2849>

도심 오피스 빌딩의 학생 기숙사 전환

도심 내 오피스 빌딩 공실률 높아지고 학생 기숙사 공급 부족 상황

- ◎ 만성적 학생 주거 부족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 홍콩은 세계적인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토지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학생 기숙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홍콩 정부는 ‘국제 교육 허브(International Education Hub)’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주거 문제 해결 없이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유치·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 ◎ 포스트 팬데믹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확산과 관광 산업 재편으로 도심 내 호텔·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진 반면, 학생 주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함. 이에 정부는 민간의 유휴 상업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필요성을 절감
- ◎ 도시 재생 및 토지 이용 효율화
 - 대규모 신축 대신 기존 빌딩 리모델링으로 신속하게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효과적임

유휴 상업용 건물을 학생 기숙사로 전환

- ◎ 홍콩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유휴 상업용 건물을 학생 기숙사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용도 변경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신속 승인 시스템: 기존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던 상업용 건물의 ‘학생 기숙사’ 용도 변경(Change of Use)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개발국(Development Bureau) 산하에 전담 창구를 두어 소방 안전·건축 규제를 일괄 처리
 - 인센티브 제공: 건물을 기숙사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토지 할증금(Land Premium)을 조건부 감면하거나 유예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
- ◎ 운영 모델의 다양화

- 민간 주도형: 민간 개발사나 투자자가 건물을 매입·개조해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고 정부는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대학-민간 협업형: 대학이 민간 건물을 장기 임차하고 운영은 전문 주거 관리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학은 초기 건축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기숙사를 확보 가능
- 공간 설계 및 시설 기준
- 공유 공간 의무화: 학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용 주방, 스터디룸, 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권장
 - 스마트 관리: IoT 기반 에너지 관리 및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 건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

시사점

- 용도 혼합(Mixed-use)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
- 특정 구역을 오피스·상업 지역으로 고착화하지 않고 수요 변화에 따라 주거 기능을 유연하게 삽입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 이는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 해결에도 직결
- 데이터 기반의 공간 최적화(15분 도시와 연결)
- 기숙사 전환 사업은 대중교통 거점 인근 유휴 공간을 재발견하는 작업으로, 교육·주거·여가가 보행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15분 도시 모델 실현에 기여. 서울의 대학가 주변 노후 빌딩 적용 시, 청년 주거 복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음
- 민관 협력(PPP) 모델의 확장
- 정부가 모든 주거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음. 기숙사라는 특수 목적 주거는 관리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민간 참여가 효율성을 높임
- 사회적 통합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
- 학생 기숙사를 도심에 배치하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거주해 인구 역동성이 높아짐. 향후 시니어 하우스 등 다른 특수 목적 거주로 확장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지은 통신원



https://www.devb.gov.hk/en/about_us/policy/2025-policy-address-supplement/policy-address-initiatives/index.html

<https://www.edb.gov.hk/en/edu-system/postsecondary/policy-doc/studenthostel/index.html>

<https://www.jll.com/en-in/insights/hong-kongs-hostels-in-the-city-scheme-prospects-and-ri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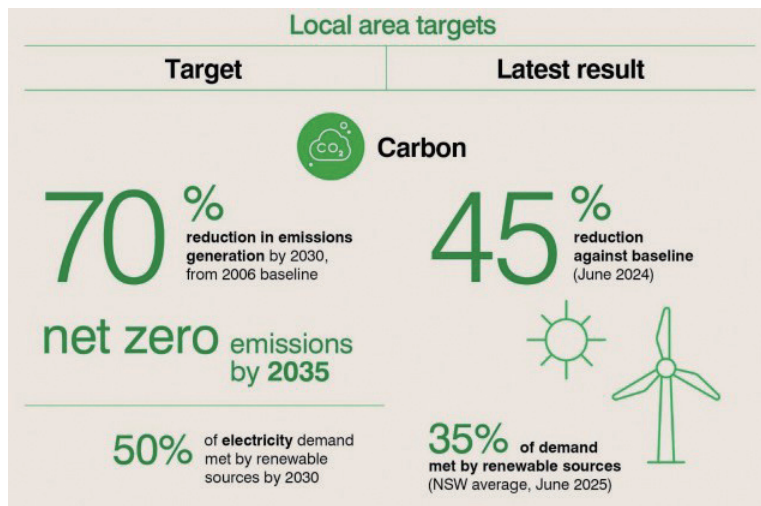
<https://www.cbre.com.hk/insights/articles/hong-kong-hostels-in-the-city-scheme-for-student-housing-urban-revit>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과 성과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목표와 성과

- 시드니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30-2050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행 중
- 2007년 청사 운영의 탄소중립 달성, 2011년 호주 최초로 탄소중립 정부 인증
-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됨
- 공공부문 운영 배출량은 2023년 기준 78% 감축을 달성하여 2030년까지 목표치(80%)에 이미 근접
- 시 전체 배출량은 2006년 대비 2030년까지 70% 감축이 목표이며 2024년까지 45% 달성. 인구나 노동인구가 50~60% 이상 증가했음에도 목표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임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50%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

[그림 4] 시 전체 탄소배출 저감과 재생에너지 사용의 목표와 결과(출처: Green Report 2025)



탄소중립 관련 세부 정책과 사례

- 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과 시민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
- 공공부문 시설 및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가로등 LED 교체, 시 소유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 재생에너지 전환: 2020년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풍력발전소 2곳과 태양광 발전소 1곳에서 100% 재생에너지 구매, 연간 약 2만 톤 탄소 감축
-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도입, 전기식 잔디깎기·쓰레기차·청소차 운영, 2021년부터 시드니시 전철은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 건축 규제 강화: 신축·재건축 시 넷제로 건물 기준 적용
- 민간 협력 프로그램: Better Buildings Partnership, CitySwitch Green Office, Sustainable Destination Partnership 등
 - Better Buildings Partnership은 시내 오피스 공간의 59%를 대표하며, 2021년 기준 배출량 66% 감소, 2030년까지 83% 감소 목표
- 중소기업 지원: 작은 규모의 사업체는 호주 소매업협회 등이 지원하여 넷제로 로드맵 작성, 앱(Greener for Business)을 통해 넷제로 행동계획과 비용 절감 안내
- 지역사회 참여: 주민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식 고취 및 행동 변화 유도
- 에너지 전환 신기술에 대한 투자: 지역 기업(Buildings Alive)에 건물의 실시간 재생 가능 전기와 비용 추적 지원 소프트웨어 설루션 개발 지원. 이 기술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의 실시간 탄소 관리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짐

성과와 과제

- 시드니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
- 지난 10년 동안 연간 50만 달러 절감,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로 발전
- 재원 확보, 정책 실행의 일관성, 시민 인식 변화 등 도전 과제 남아 있어 지속적 개선 필요

— 황현정 통신원

<https://www.cityofsydney.nsw.gov.au/environmental-action/energy-and-climate-change>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net-zero-by-2035-city-sydney-bold-new-plan>

<https://carbonneutralcities.org/cities/syd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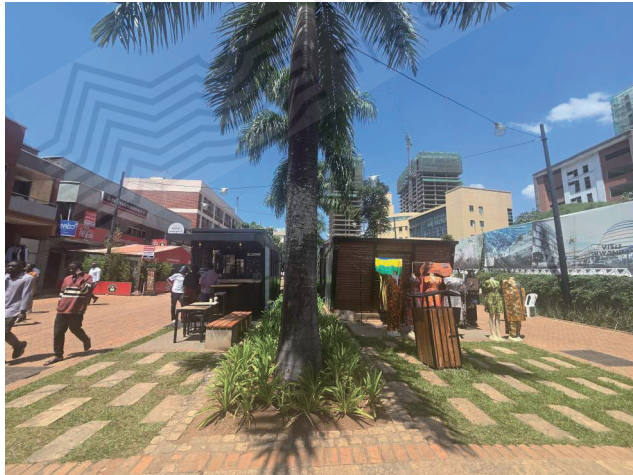
<https://www.cityofsydney.nsw.gov.au/research-reports/green-reports>

보행 중심 공공공간 전환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심 환경 악화와 정책 변화

- 자동차 급증으로 도심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저하가 발생하고 공공 여가 공간 부족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 필요성이 커짐
- 키갈리시는 ‘키갈리 마스터플랜 2050’을 통해 보행성 강화와 비자동차 교통(NMT: Non-Motorized Transport)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
- 신규 공원 조성 대신 기존 도로 기능을 전환하여 ‘임부가 시티 워크(Imbuga City Walk)’라는 대표적인 상시 카프리존(Car-Free Zone)을 구축

[그림 1] 키갈리 시청 앞에 조성된 카프리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행·체류 공간 ‘임부가 시티 워크’

- 임부가 시티 워크는 단순한 교통 통제를 넘어 휴식·문화·경제 활동이 공존하는 보행 중심 공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기존 KN4 도로 약 520m 구간을 보행로·자전거길·소광장·카페 테라스로 재구성, 벤

치·그늘·잔디밭을 배치해 '머무는 거리' 지향

- ◎ 별도의 토지 수용 없이 기존 도로를 재설계해 초기 조성·확장에 약 6억 RWF을 투입, 가로등·무료 와이파이 등 시민 편의 인프라 정비
- ◎ 민관협력(PPP) 운영: 시정부는 행정 지원, 민간 운영사(Mopas)는 행사·시설 관리 담당, 임대·광고 수입으로 유지관리비 충당하는 자립형 운영 모델 지향

누구나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거리 사회적 효과

- ◎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으로 교통 약자 접근성 개선,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
- ◎ 자동차를 가진 중산층 이상이 드나들던 상업지구가 다양한 계층·연령·소득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포용적 공간으로 기능
 - 르완다 국립대학교 연구진(Njeru, Kinoshita, 2025)은 키갈리시 도심 카프리콘(Imbuga City Walk) 이용자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공간이 서로 다른 소득·연령·이동수단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과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음
- ◎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여성 창업자의 진입 장벽 완화, 대형 쇼핑몰 중심이 아닌 길 중심의 자연스러운 상권 육성
- ◎ 글로벌 랜드마크 부상: 시민 휴식처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으며 매체와 SNS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있음

[그림 2]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카프리콘 중앙의 모형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 키갈리시 카프리존은 대규모 공사나 신규 부지 확보 없이도 도심 도로 기능 전환(Road Diet)을 통해 도시의 보행 환경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
- 하드웨어 조성보다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의 접근: 초기 단계부터 민간 운영 주체(PPP)를 참여시켜 지속적 콘텐츠 공급 체계 마련 필요
- 무장애 설계 원칙 확립으로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도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복지 실현
- 관광 전략과 결합해 도심 거리를 '통과하는 공간'이 아닌 '방문하고 싶은 목적지'로 재정의

—한울 통신원



Malonza, J. (2021). "Celebrating a Revamped Kigali Car Free Zone: Imbuga City Walk." Centre for Sustainable, Healthy and Learning Cities and Neighbourhoods(SHLC). <https://centreforsustainablecities.ac.uk/news/celebrating-a-revamped-kigali-car-free-zone-imbuga-city-walk/>

Urbanet. (2024). "Car-free Urban Spaces: Kigali's Imbuga City Walk." Urbanet – Cities in Focus. <https://www.urbanet.info/car-free-urban-spaces-kigali/>

UrbanShift. (2023). "Kigali, Rwanda: Imbuga City Walk Car-Free Zone." UrbanShift / Shift Cities, UN Environment Programme. <https://www.shiftcities.org/publication/kigali-rwanda-imbuga-city-walk-car-free-zone>

Rwanda Virtual Tours. (2021). "Imbuga City Walk: Kigali's Car-Free Green Space." Rwanda Virtual Tours. <https://rwandavirtualltours.rw/imbuga-city-walk-3/>

The New Times Rwanda. (2022, June 30). "City of Kigali to Invest Rwf600m in Extending Imbuga City Walk." The New Times Rwanda / Africa Press. <https://www.africa-press.net/rwanda/all-news/city-of-kigali-to-invest-rwf600m-in-extending-imbuga-city-walk>

One More Adventure Safaris. (2024). "Kigali Car Free Zone – Imbuga City Walk." One More Adventure Safaris. <https://www.onemoreadventuresafaris.com/kigali-car-free-zone/>

World Urban Campaign. (2023). "(Re)thinking Car-Free Urban Spaces: Kigali's Imbuga City Walk." World Urban Campaign. <https://www.worldurbancampaign.org/post/re-thinking-car-free-urban-spaces-kigali-s-imbuga-city-walk>

Njeru, J., & Kinoshita, I. (2025). "The Influence of Landscape Functions and Place Type on Place Attachment: A Case of Kigali City's Car-free Zone." *Journal of Urban Design and Mental Health* (online ahead of print). Taylor & Francis Online.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467581.2025.2584881>

City of Kigali. (2020). Kigali Master Plan 2050 – Implementation Plan. City of Kigali. https://bpmis.gov.rw/asset_uplds/kigali_master_plan/6_%20Kigali%20Master%20Plan_Implementation%20PlanLowRes.pdf

GoMetro, UN-Habitat, Wuppertal Institute, UEMI. (2022). Africa Urban Mobility Observatory – Kigali Action Plan. High Volume Transport (HVT) Applied Research Programme. <https://transport-links.com/wp-content/uploads/2023/10/africa-urban-mobility-observatory-action-plan-kigali.pdf>

National Bank of Rwanda. (2026). "Exchange Rate." National Bank of Rwanda. <https://www.bnr.rw/exchangeRate>

New Times Rwanda. (2021). "VIDEO: Explore the New Imbuga City Walk." The New Times Rwanda. <https://www.newtimes.co.rw/article/189717/News/video-explore-the-new-imbuga-city-walk>

JTBC. (2025). 「특과원 25시 - 르완다 편」 방송 자료. 관련 기사: 나무뉴스. (2025, Feb 27).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르완다, 韓 새마을 운동 벤치마킹했다고? (특과원 25시)." <https://namu.news/article/2577216>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현철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 한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정연주

세계도시정책동향

598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ISSN 2586-5102

발행일 2026년 3월 30일

디자인 박진범

인쇄·제본 경성문화사

세계도시정책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세계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시 정책 전문가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세계도시정책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 세계도시정책동향은 세계도시동향의 발간 취지를 이어받으면서도 새롭고 한층 심도 있게 개편한 서울연구원 정기간행물의 새 이름입니다.